

대한상의 브리프

강승만
(주)유비소시어스 인재연구소장
공공정책 · 환경 전문가



제46호 2017년 12월 26일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기조 아래 환경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새 정부 환경정책의 주요 변화와 세부내용을 국정과제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을 짚어 보았습니다.

편집자주

[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환경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기업 전략

“환경문제는 삶의 질 차원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안보로 등장했다. 새 정부는 환경정책에 대한 기본 기조를 바꾸려고 한다.”

지난 6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다. 이어 “환경부는 모든 국가 정책을 환경 측면에서 얘기하라”고 주문하며 환경분야에 힘을 실어 주었다. 경제 패러다임의 큰 변화 속에서 환경정책 대전환을 예고한 것이다.

최근 국무회의뿐만 아니라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자주 소통하며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분위기와 시각이 많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규제 위주였던 환경·에너지 정책이 국가·사회적 현안으로 그 폭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미세먼지 대책, 석탄화력 축소, 원전 국민 공론화 등 환경·에너지 분야에서 굵직굵직한 정책들이 발표되었다.

정부의 환경·에너지 국정 비전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 아래 화학물질 관리,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탈원전 등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환경정책들이다.



[환경·에너지 분야 100대 국정과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국토 환경 조성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습기살균제 유사 사고에 대한 안전 관리 공고화 화학제품의 위해로부터 안심하는 사회 조성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세먼지 발생량을 임기 내 30% 감축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람과 동물이 공생하는 국토 환경 조성 4대강 재자연화와 통합 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계적으로 원전제로시대로 이행 에너지 가격체계의 합리적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 대비 감축 실현 기후변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안전 사회 구현



주요 환경정책 및 전망

① 선진국 수준의 미세먼지 감축

임기 내 미세먼지 발생량 30% 감축을 100대 국정 과제에 담았다. 미세먼지 오염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올해부터 노후 석탄발전소(8기)에 대해 일시 가동 중단에 착수했고 신규 건설은 불허할 방침이며, 2022년까지 30년 이상 된 노후 화력발전소(10기)를 전면 폐쇄할 계획이다. 또한 단계적으로 경유차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차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다량배출사업장의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새롭게 발표됐고, 먼지총량제, 질소부과금제 등도 검토 중이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사업장 대기 관련 규제 강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② 믿고 사용하는 안전한 생활제품

화학물질·제품 위해성 평가 등 선진적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먹거리 안전의 국가 책임제를 과제 목표로 한다.

먼저 전 국민적 이슈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방지를 위한 구제 계정 1,250억원이 조성된다. 또한 화학물질 유해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관리하는 제도도 강화된다. 제조·유통 및 식품 표시 안내를 확대해 화학물질 제품 및 전 주기적 먹거리 안전 강화 등을 포함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화학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이 발표되었고, 이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법)' 제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③ 탈원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탈원전 로드맵을 제시하고 단계적으로 원전 제로 시대로 이행을 목표로 에너지 가격체계의 합리적 개편과 분산형 전원 보급 확대를 과제로 정했다.

앞서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건설 중단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찬성 59%, 반대 40%로 공론화위원회는 공사 재개를 권고했고, 지난달부터 공사를 재개했다. 하지만,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지난 6일 국회에서 확정된 2018년 신재생에너지 예산이 사상 첫 1조원을 넘었다. 향후 태양광 등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태양광 · 풍력 발전]



④ 기후변화 리스크 최소화

정부는 2021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 대비 상당한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증가 억제에 위해 제로에너지 건물 확대, 중·대형차 온실가스 기준 신설, 공공기관 배출량 30% 감축, 폐자원 에너지 활성화 등 부문별 감축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파리 기후변화협정 이행을 위한 국제·국내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대응방향

①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이슈 관리 철저

가습기 살균제 및 미세먼지 피해, 생리대 발암물질 검출 등 최근 발생한 환경사고로 인해 국민의 모든 이목이 환경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기업은 사업장 및 제품환경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정부의 관련 정책들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어 기업의 안이한 대응은 공장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반면 우수 사례는 적극 홍보하여 '친환경 기업' 이미지도 획득하는 일석 이조의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② 제품 전 과정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생활화학제품 기업들을 중심으로 제품의 전 성분 공개가 확대되고 있다. 소비자의 알 권리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의 성분 공개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전 과정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제품안전 관련 조직, 인력, 교육을 강화하여 전 과정에 걸친 리스크 관리와 방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③ 그린 컨슈머 트렌드 공략

환경이슈는 소비자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때 인기였던 '친환경' 디젤차는 지난해 연비와 배기가스 조작 등 '디젤게이트' 직후 소비자의 외면을 받고 판매량이 급감했다. 반면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수소차와 전기차는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 미국 '테슬라'를 필두로 전기차와 태양광 발전 등 각광받는 미래 산업은 정부 지원 속에 시장의 필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혁신적인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우리 기업도 글로벌 선두주자가 되어야 한다.

④ 4차 산업혁명 기반 혁신기술 개발


미세먼지, 수질, 에너지 등 전 영역에서 혁신 기술의 역할이 커질 것이다. 4차 산업혁명 대표 기술인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분석 등이 적용될수록 오염물질, 에너지 배출을 좀 더 정밀하게 측정·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성장 일변도 정책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로 하여야 한다. 기술 도입으로 삶의 질을 어떻게 나아지게 할 것인지, 발전을 넘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철학적 고민도 필요하다.

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역량 강화

정부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지원 정책들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환경 관련 사업들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분야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자문이 큰 도움이 된다. 특히 KOTRA,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환경 관련 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금융,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정책들을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환경 오염 등 모든 사회적 문제에는 비즈니스 기회가 내재한다”고 말했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직접 기술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친환경'은 기업의 책임성을 넘어 경제성을 위해 강조해야 하는 가치가 된지 오래다. 환경오염 없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전기차 등 환경을 키워드로 하는 산업 규모는 천문학적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기업이라면 정교하게 환경비전을 가다듬어야 할 때다. 

국내·외 경제지표

2017년 12월 26일 기준

1. 국내·외 경제성장률

(단위: %)

	2015	2016 ^(E)	IMF		OECD	
			2017 ^(P)	2018 ^(P)	2017 ^(P)	2018 ^(P)
한국	2.8	2.8	3.2	3.0	2.6	2.8
세계	3.4	3.2	3.6	3.7	3.5	3.6
미국	2.9	1.5	2.2	2.3	2.1	2.4
중국	6.9	6.7	6.8	6.5	6.6	6.4
일본	1.1	1.0	1.5	0.7	1.4	1.0
EU	2.0	1.8	2.1	1.9	1.8	1.8

* E : 잠정치(Estimate) / P : 예상치(Projections)

2. 환율·유가¹⁾

(단위: 원(환율), 달러(유가))

	2015	2016	'17.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원/달러	1,131	1,161	1,130	1,134	1,131	1,132	1,132	1,105
원/엔	934	1,068	1,019	1,009	1,030	1,022	1,002	979
원/위안	180.1	174.4	166.1	167.5	169.2	172.3	171.1	166.8
원/유로	1,255	1,283	1,269	1,306	1,337	1,348	1,331	1,296
유가(Dubai)	32.2	53.8	46.5	50.4	49.3	55.2	58.3	60.82

3. 산업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2015	2016	'17.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산업생산	1.9	3.0	1.7	2.0	2.5	7.4	-2.2	-
소매판매	4.1	4.3	1.1	3.6	0.9	8.4	-0.2	-
설비투자	6.9	-1.3	18.6	24.9	12.4	24.9	-3.4	-
수출	-8.0	-5.9	13.4	19.5	17.3	35.0	7.1	9.6
수입	-16.9	-6.9	19.8	15.5	15.3	21.7	7.9	12.3

1) 환율은 월 평균 기준, 유가는 기말 기준